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5. 3. 24.
No. 1006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윤석 부연구위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서민호 연구위원
김찬용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주요 내용

❶ 국가 성장동력인 혁신산업 일자리의 극단적 편중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❷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 최근 10년간 증가량 중 68.0%가 수도권에 집중
- 전국 138개 지역노동시장권 중 서울권과 경기남부권 두 곳에서 전체 증가량의 57.5%를 차지
- 혁신산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은 수도권에서 천안과 청주를 거쳐 세종과 대전을 잇는 포도송이형 거대 군집을 형성하며, 전체 증가량의 75.3%를 차지

❸ 반면, 주요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5개 지역(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제주권, 춘천권, 나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산업 일자리 성장세가 발견
- 이들 중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 없이도, 혁신기관과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도 발견됨(원주, 전주 등)

❹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이 가능하며, 중간지원조직 중심 육성모델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

❺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구체화하기 위해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연구, 입주기업 설문조사, 인터뷰, 관련 논의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정책방안

❶ 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역외기업 유치(hunting)에서 지역혁신기업 육성(gardening) 모델로 전환
-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기업지원·중개 기능이 집약된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
- 지역 주도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맞춤형·단계적 지원 필요

❷ 세부 정책방안으로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가칭) 제안
- 지방혁신산업 생태계의 조기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수 지역(2~3개 내외)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단계적 지원

01. 혁신산업 일자리의 쏠림, 지역 간 격차를 확대

혁신산업 일자리의 과도한 지리적 편중은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Akinson et al. 2019)는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이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는 미국 내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의 90% 이상이 보스턴, 실리콘밸리 등 소수의 슈퍼스타 지역에 집중된 "승자독식(winner-take-most)" 구조임을 밝히며, 이런 구조에서는 혁신산업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지역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
  - 그 이유는 단순히 혁신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서가 아니라, 다른 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지니기 때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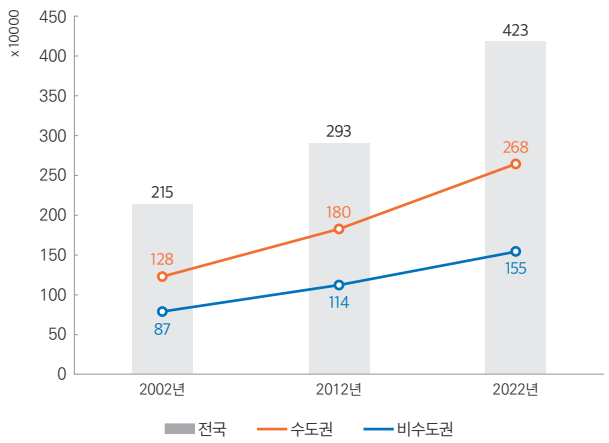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제기는 학계와 정책당국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으며, 미 연방정부가 나머지 지역들에도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5월 지역 테크허브 프로그램(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 Program) 시행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집중, 최근 10년간 증가량 기준으로는 68.2%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비수도권보다 한층 더 빨라져 수도권 쏠림 심화

- 수도권은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5%, 종사자 수의 55.4%, 청년인구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높은데, 2002~2022년 최근 20년간 전체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중 수도권이 67.5%를 차지
  - 2012년 이후 최근 10년간 증가량 기준으로는 68.2%를 기록하며 수도권으로 집중이 한층 더 가속화

그림 1 2002~2022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수 변화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혁신산업 일자리의 조작적 정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digit)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 모두 상위 25%에 해당되는 업종 :

❶ 매출액 중 R&D 투자액 비중
❷ 종사자수 대비 R&D 전담인력 비중

이에 해당되는 중분류 기준 17개 업종(제조업 6개 업종, 서비스업 11개 업종)의 일자리를 혁신산업 일자리로 분석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2, 2012, 20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버클리대학교 엔리코 모레티 경제학교수도 같은 주장. 그의 실증연구(Moretti, 2010)에 따르면, 혁신산업 일자리 하나가 늘어날 때 해당 지역에 추가로 4~5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제조업의 추가 일자리 효과(1~2개)를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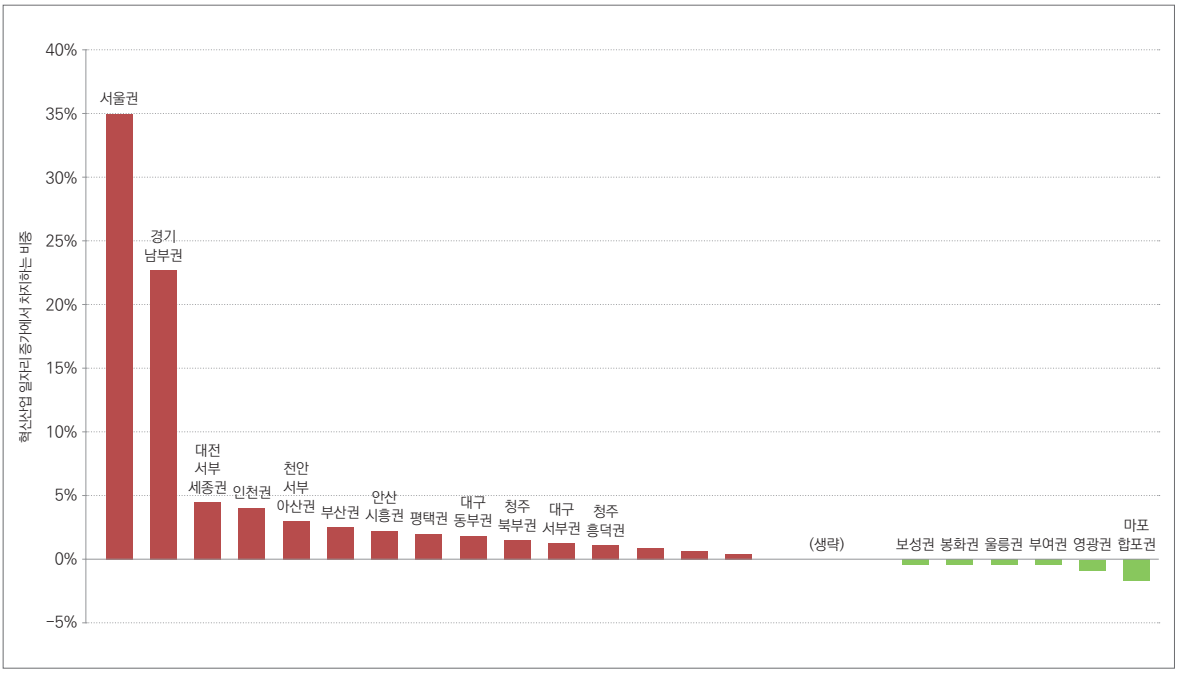
02. 138개 지역노동시장권 단위 혁신산업 분포

전국 138개 지역노동시장권 중 서울권과 경기남부권이 1, 2위, 전체 증가량의 57.5% 차지

전국 138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전체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에서 서울과 경기남부권이 1, 2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증가량의 57.5%

- 서울권이 35.1%, 경기남부권 22.4%로 3위인 대전서부세종권(4.5%) 등 나머지 지역과 큰 차이

그림 2 최근 20년(2002~202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2, 20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혁신산업 일자리 총량, 증가량, 상대지위 변화 분석결과: Superstars, Lagging stars, Emerging stars

혁신산업 일자리의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지역들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① 혁신산업 일자리 개수, ② 지난 20년간 증가량(점유율), ③ 상대지위 변화(점유율의 변화)의 세 가지 항목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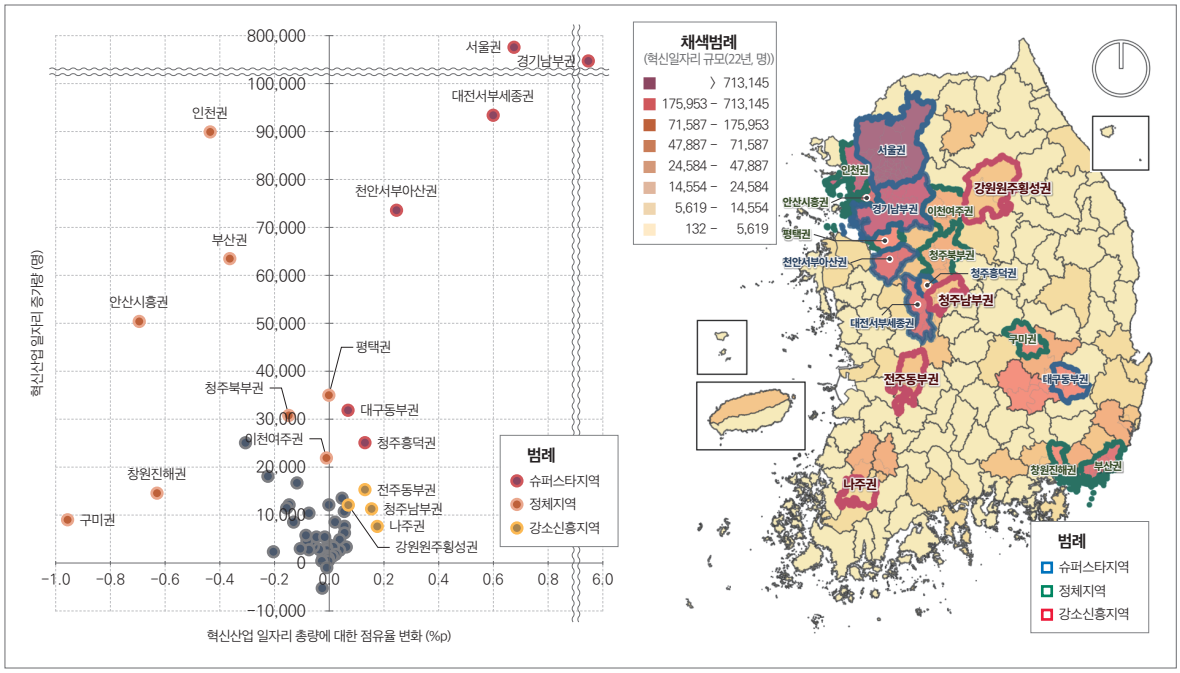
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지역은 총 18곳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슈퍼스타지역(Superstar) 6곳**: 양(총량 또는 증가량)과 상대지위 변화 모두 상위 10위권인 최상위 지역
- **정체지역(Lagging star) 8곳**: 양은 상위 10위권이나, 상대지위가 하락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지역
- **강소신흥지역(Emerging star) 4곳**: 양은 10위권 밖이나, 상대지위 증가 상위 10위권의 빠른 성장세 지역

표 1 분석을 통해 식별된 18개 혁신산업 일자리 상위지역

구분	슈퍼스타지역(Superstar)	정체지역(Lagging Star)	강소신흥지역(Emerging star)
수도권	경기남부권, 서울권	안산시흥권, 인천권, 평택권, 이천여주권	-
비수도권	대전서부세종권, 천안서부아산권, 대구동부권, 청주흥덕권	구미권, 창원진해권, 부산권, 청주북부권	강원원주횡성권, 나주권, 전주동부권, 청주남부권

그림 3 18개 혁신산업 일자리 상위지역의 위상(좌)과 공간적 분포(우)



주: 지도에 표기된 색상은 2022년 혁신산업 일자리 규모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2, 20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수도권~대전서부세종권 거대권역이 전체 증가량의 75.3% 점유, 규모는 작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인 지역도 관찰

혁신산업 일자리의 공간적 분포는 크게 세 가지 군집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그 인근)** 일자리 증가량 기준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서울권, 경기남부권에서 대전서부세종권까지 걸친 포도송이 형태의 광역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증가량의 75.3%을 차지
  - 6개 슈퍼스타지역 중 대구동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이 모두 여기에 포함
- **(경부축 남단)** 대구동부권을 중심으로 구미권, 부산권, 창원진해권을 아우르는 권역
  - 슈퍼스타지역인 대구동부권 외에 구미, 부산, 창원 등은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력이 다소 정체
- **(그 외 강소신흥지역)** 강원원주횡성권, 청주남부권, 전주동부권, 나주권
  - 수도권에서 멀리 있고 수위도시도 아님에도 상대적으로 혁신산업 일자리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03. 비수도권 혁신산업 일자리 유망지역과 성장요인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 평균 이상인 지역은 총 19곳, 이 중 수도권 주변이 아니고 주요 대도시에도 속하지 않지만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지역이 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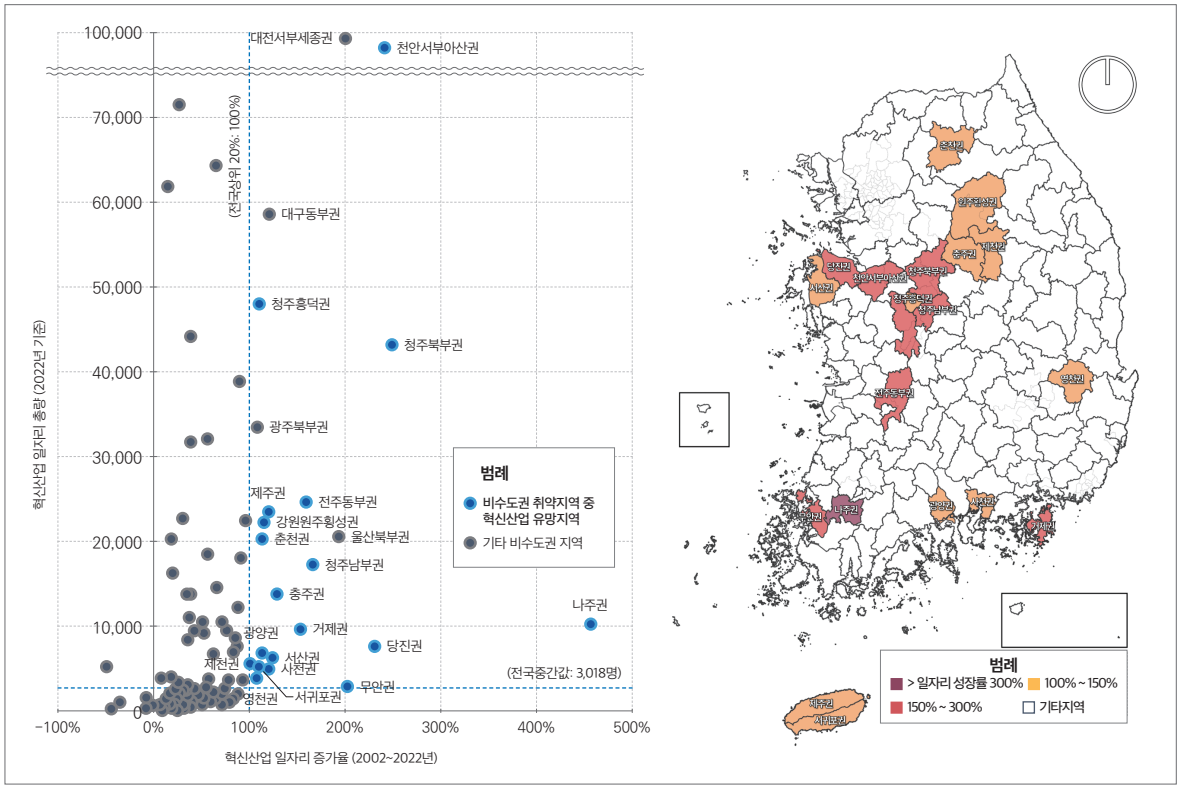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한 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나주권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비수도권 유망지역들이 더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

-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제외한 126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① 혁신산업 일자리 개수가 전국 중간값(3,000개)보다 많고, ② 최근 20년간 성장률 100% 초과 지역을 식별

그 결과 총 19개 비수도권 유망지역이 식별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앞에서 파악한 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나주권 외에도 제주권과 춘천권이 추가로 성과 상위지역으로 확인(총 5개 지역)

- 이 5개 지역은 수도권 인근의 비수도권 지역들(청주 등) 다음으로 혁신산업 일자리 총량과 증가율이 높은 지역
  - 규모와 증가량이 광양, 거제, 당진권을 상회하고, 광주북부권, 울산북부권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음

그림 4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19개 혁신산업 일자리 유망지역의 위상(좌)과 공간적 분포(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2, 20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19개 비수도권 유망지역의 성장요인 분석: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 없이도 빠른 성장세를 보인 지역들 확인

비수도권 19개 유망지역에서 혁신산업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선도기업 식별, 기업 간 거래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탐색적 분석 실시

대다수 지역에서는 대기업 주도의 생산 네트워크 확장이 혁신산업 일자리의 성장을 견인(예: 청주권, 천안서부아산권 등), 또는 공공기관 등 앵커기관 이전이 핵심적 역할(예: 나주권 한전, 사천권 KAI)

반면, 이러한 외적 요인의 수혜(place luck)가 없었거나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혁신산업 일자리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지역들도 있었는데, 강원원주횡성권, 춘천권, 전주동부권이 대표적

- 이들 세 지역은 혁신산업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도, 지역 내 혁신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Post-BI)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혁신산업 일자리를 일구어내는 성과를 거둠
- 이는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 대기업 유치가 어렵더라도, '육성 중심의 혁신거점 모델'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

04. 초기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 유효한 혁신거점 모델

기존 혁신거점 모델이 가진 한계

기존의 혁신거점 모델은 산학연 중심의 연구개발(R&D) 거점(예: 연구개발특구)이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육성 모델(예: 첨단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방의 열악한 여건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심의 혁신거점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MIT가 자리한 보스턴 캔달 스퀘어처럼 강력한 앵커기관과 인재집적이 필수적이나, 지방에서는 이처럼 높은 연구역량과 인적 자원을 갖춘 곳이 극히 드묾
  - 현실적으로 고급 인재 확보는커녕, 생산직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대다수 지방의 현실
-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거점 모델도 부지조성과 세제혜택만으로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 혁신산업 기업들에는 비용절감보다는 우수한 인재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
  - 아무리 세제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을 두고 인재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 낮음

기반이 미흡한 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모델: 배양실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중심 Post-BI 육성

초기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 혁신거점 구축의 성공요건은 기업과 인재가 오지 않는 교착상태 극복과 임계질량 확보

- Moretti(2012)는 초기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를 '나쁜 균형상태(bad equilibrium)'의 지속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려면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처럼 '점프 스타트(jump-start)'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 인재, 전문화된 비즈니스 서비스의 동시 유치를 위한 '조직화된 정책(coordinated policy)'이 필수적이라고 제시
  - 자동차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거점 구축 초기에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시장실패 교정 차원에서 정부의 빅 푸쉬(big push) 필요성도 강조
-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르텍스(CORTEX) 혁신지구 사례에서도 초기 임계질량 확보전략이 핵심 요소
  - 그 방법으로 '기업가적 밀도(entrepreneurial density)'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 기술지원 인큐베이팅 시설, 벤처카페, 트레이닝센터 등을 일정 구역 내에 집중시킴으로써 초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혁신 창출과 기업 간 교류 극대화 도모

전주와 원주의 혁신거점 사례연구 결과, 초기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혁신산업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완성된 기업의 유치'보다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미숙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었음

- 전주 사례에서는 팔복동의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원기관과 혁신기관이 인근에 집적되어 창업 후 성장단계 기업들(Post-BI)을 위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배양실 역할 수행
  - 기업을 성장시켜 지역 내 산단에 안착시키는 선순환 구조 형성 초점

그림 5 전주 혁신거점 사례의 메커니즘

자료: 송기정 2024, 11.

이러한 접근은 미국 이코노믹 가드닝(economic gardening) 전략에서도 확인: "홈런(대기업)만 노리지 말고 번트와 안타에 집중하자(Gibboons 2010)"

• 이코노믹 가드닝은 전형적인 역외기업 유치전략의 대안적 접근으로 현재 오리건주 등 다수의 주에서 운용
  - 중소규모 도시에서 대기업 유치를 시도할 경우 비용부담도 크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설사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에 남는 편익이 적다는 비판적 인식에 기반
  - 이에 따라 창업보육단계 기업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갖춘 10~99인 규모의 Post-BI 기업에 집중하여 정보(시장상황, 인증요건 등), 인프라(양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연결(공공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나 기관과의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맞춤형 지원을 강조

이처럼 초기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기업과 인재가 오지 않는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Post-BI 육성모델은 특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단순히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에서 창업 후 성장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성하는 접근 방식이므로, 초기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 걸림돌이 되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Post-BI 육성모델의 가능성 검증

전주와 원주의 혁신거점 사례에 입주한 12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혁신거점 모델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맡았던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선순환구조 형성도 가능함을 확인

• 입주 동기나 협력 파트너로 대기업이나 대학을 선택한 응답은 극히 적었으며, 창업·사업화 및 R&D 지원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응답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사업화단계가 올라갈수록 대학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확장 및 연계 측면에서 대학과의 협력은 고려 필요
• '기업을 키워도 결국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남겠다는 응답이 75%
  - 이는 적절한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그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실제로 전주와 원주의 혁신거점에서 성장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지역 내 자체공장 및 사옥을 설립해 정착

05.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3대 기본방향

결론적으로, 지방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거점 조성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성장기업을 배양하고 정착시키는 '배양실 역할'을 하는 혁신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할 필요

• **(육성 중심의 접근법)** 일시적 효과에 그칠 여지가 큰 외부기업 유치(hunting)보다, 지역 내 창업 후 성장기업의 육성(gardening)과 정착을 통한 선순환구조 형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
• **(소규모 앵커 플러스 모델)** 집약된 기업지원 및 중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하여, 입주기업의 수요와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적시에 확충함으로써 임계질량을 확보해나가는 방식 필요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거드는 체계)** 지자체와 지역이 주도하여 최소한의 기반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지역 노력으로 극복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 더불어,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
  - 파트너십 기반의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 전략, 혁신주체 간 파트너십 형성의 구심점 또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주도자(initiator)의 존재, 내외부 자원을 결합해가며 기업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관리·운영기관(operator), 확장 가능성을 갖춘 부지의 확보 등

세부 정책방안: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제안

혁신산업 생태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시적, 단계적 지원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 초기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임계질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나쁜 균형상태'가 지속될 여지가 큼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여러 지역에 나눠주기식 지원을 하거나, 중앙정부 부처별로 제각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필요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5개 중앙부처들이 함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빅 푸쉬(big push)형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 실시)에 근거

소수 지역을 선별,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

- 단순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정부지원 없이도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들이 아니라,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지역들 중 중앙정부 추가 개입의 효과가 큰 소수(약 2~3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지원
- 기존 범부처 협력사업처럼 정형화된 지원방식(메뉴판식 지원)이 아닌, 각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자체적 해결은 어려운 부분(the most needed)을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방식 적용
  - 소수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효과가 입증될 경우 공식 지원 프로그램화
  - 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의 예로 미국 메사추세츠주 TDI 사례에서 운용한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고려 가능

  * TDI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더나 기획력이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이에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퇴직인력 활용 등)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고 비용 보조
- 최소 3~5년간 단계적,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설계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미미한 지역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지원을 전환

참고문헌

송기정. 2024. 제조창업 플랫폼 J-Valley 캠틱종합기술원. 기관 소개자료.

Atkinson, R., Muro, M. and Whiton, J. 2019. *The case for growth centers: How to spread tech innovation across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Gibbons, Christian. 2010. Economic Gardening.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9, no.3: 5.

Moretti, Enrico. 2010. Local Multiplier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00.2: 1-7.

_____. 2012. *The New Geography of Jobs.* Boston, MA: Mariner Books.

- **이윤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yslee@krihs.re.kr, 044-960-0365)
- **조성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sccho@krihs.re.kr, 044-960-0153)
-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mhseo@krihs.re.kr, 044-960-0379)
- **김찬용**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chanyongkim@krihs.re.kr, 044-960-0158)
- **전봉경**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jeon@krihs.re.kr, 044-960-0303)
- **김명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kmh@krihs.re.kr, 044-960-0149)

※ 이 브리프는 "이윤석, 조성철, 서민호, 김찬용, 전봉경, 김명한. 2024.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100% 사탕수수 부산물 펄프 | 비목재 | 생분해성 | 완역한 의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